

남구, 조선대 교직원·동문과 ‘고향사랑 맞손’



남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조선대 교직원·동문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건강 노년맞이 지정기부 사업 발굴·추진 및 지역사회 상생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남구는 7일 “오는 25일 구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 조선대학교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 노년맞이(웰에이징) 기부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김병내 구청장과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및 교직원, 동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교류

와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돌봄 여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건강 노년맞이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부금 모금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조선대와 조선 이공대 교직원 및 동문을 대상으로 공동 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향사랑 기부 참여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선대학교와 논의 중인 건강 노년맞이 분야 지정 기부 사업은 어르신 그라운드 및 파크 골프 대회와 노년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구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과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협약이 대학 구성원과 동문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구 관계자는 “조선대학교와의 협력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 문화로 더 많이 확산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북구, 지방세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체납관리단 14명 현장 투입...징수 강화

전화 상담·현장 조사로 공정 납세문화 확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체납관리단 14명을 선발한 이후 지난 3일 직무·민원 응대·안전 수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체납 징수 체계 작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체납관리단은 세무 1·2과, 교통지도과 등 3개 부서에 배치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5대 징수 부진 항목(▲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을 체납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체납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 원인을 살펴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주민에게는 복지상담을 연계

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공정한 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별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납부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장기간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직접 확인한다.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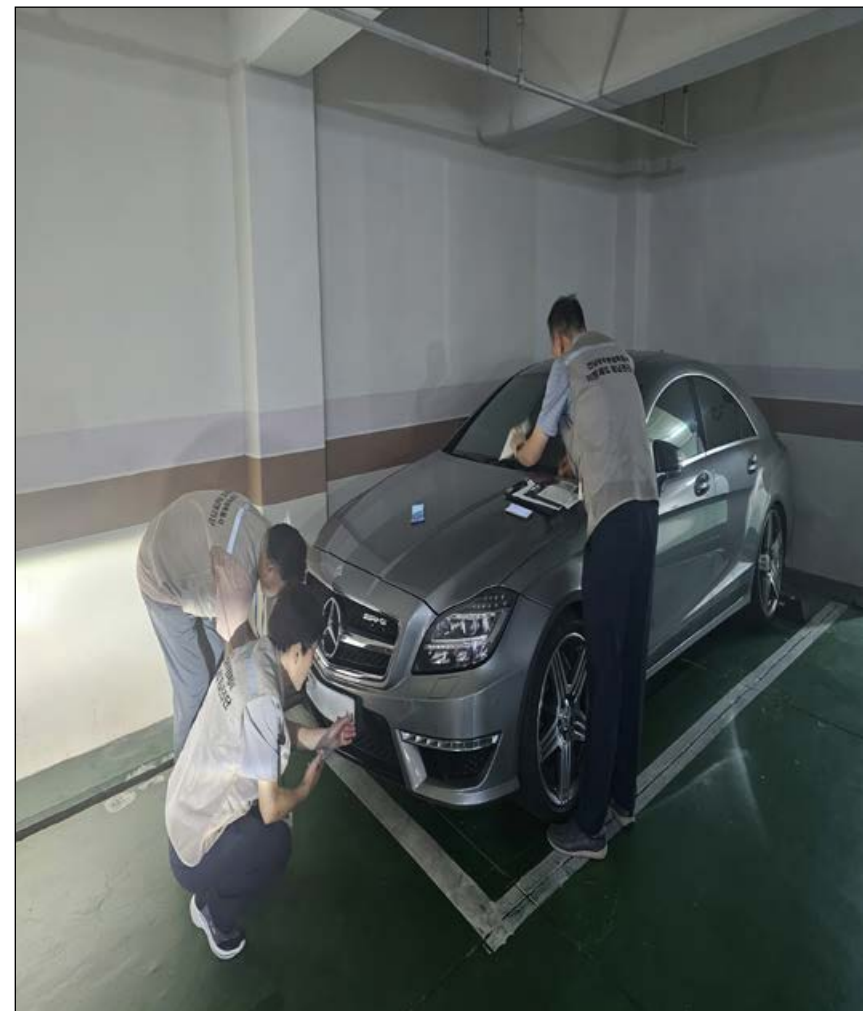
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지원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힘을 보탠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납 관련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향후 징수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와 주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다.

북구는 체납관리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광주 북구청 제공

